

# 25년 축적 광주 광산업 재도약... '광반도체 시대' 연다

### 광주시, 산·학·연 참여 '미래포토닉스상생협의회' 출범 기업 270개 매출 3조2000억 성장...AI·우주·방산 중심

광주시가 지난 25년간 축적해온 광산업 기반을 토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우주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기술로 떠오른 '광반도체'를 중심으로 광융합산업 재도약에 나선다.

광주시는 12일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포토닉스(광융합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 상생협의회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한국광기술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광주과학기술원(GIST), 고등광기술연구원, 전남대학교, 지역 주요 광융합기업 10개사 등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과 기업들은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 고도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기술개발(R&D)부터 인력 양성, 실증, 사업화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광주시는 정책 방향과 예산 지원을 받고, 한국광기술원(KOPT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호남권연구본부 등 연구기관은 광반도체와 광센서 분야 공동 연구 및 시·협·인증을 담당한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은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기초 원천기술 연구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협의회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광반도체를 비롯해 자율주행용 라이다(LiDAR) 센서, 6세대 이동통신(6G) 광트랜시버, 우주·국방용 광학 제품 등을 미래 핵심 전략 분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광융합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시제품 성능 검증과 시장 진입을 앞당기는 한편 관련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적 반도체 연구기관인 벨기에 아이멕(IMEC), 독일 예나(Jena) 광학클러스터 등 해외 선진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지역 광산업 생태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광기술은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등 미래 혁신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존 전자 중심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 대량의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반도체'로의 기술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융합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포토닉스(광융합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는 이에 대응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차세대 광반도체 제조기반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초미세 광학 공정 구현을 위한 플라즈마 식각장비와 20나노미터(nm)급 전자선 노광장비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소재·부품 시제품 제작

7건, 시험·평가 인증 17건, 기술지도 59건 등 총 83건의 지원을 통해 49개 기업을 뒷받침했으며, 약 23억원 규모의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졌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다. 초기 광통신과 LED 조명 중심이었던 산업 구조는 현재 의료·바이오, 영상·센서, 레이저, 정밀기기 등 광융합 분야로 확대되며 미래산업 전환의 핵심 기술 산업으로 성장했다.

실제 광산업 기업 수는 육성 초기 47개사에서 현재 270여개로 늘었고, 연간 매출액은 3조2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광주지역 제조업 전체 매출의 약 6.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광산업 스타기업도 29개사로 증가하는 등 산업의 질적 성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한국광기술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개

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그동안 축적해온 광산업 기반에 광반도체 제조 기술을 더해 인공지능(AI), 방산, 양자 등 미래산업 전 분야로 도약하겠다"며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서 광융합산업을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연말까지 토지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깬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에서 주택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앞두고 원활한 매매거래를 위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시행했는데, 대상을 넓혀 매물을 지속적으로 끌어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대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최장 2년 유예했다.

이 과정에서 토허구역 내 비거주 주택은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성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들의 매도 편의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에서 다주택과 비거주 주택 등 이날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가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계약에 따라 길게는 2028년 5월 11일까지 실거주가 미뤄진다.

다만 올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가 나온 뒤에는 4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연합뉴스

## 아파트 분양심리 반등...본격 회복은 제한적

### 전망지수 광주 20p↑ 80.0·전남 29.2p↑ 62.5 "지방선거 이후 정부 정책방향·전쟁 영향 관건"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 심리가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다. 다만 여전히 기준치에는 크게 못 미쳐 분양시장 본격 회복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광주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0.0) 대비 20.0p 상승한 수치다.

전남도 62.5로 전월(33.3)보다 29.2p 올라가면서 전국에서 총복(35p↑) 다음으로 가장 높은 상승치를 보였다.

분양전망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 100보다 낮으면 반대를 의미한다. 때문에 높은 상승치를 보인 것과는 반대로 분양시장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다. 공사비 부담과 대출규제 및 고금리 장벽이 여전히 상향에서 이번 상승은 최근 미·이란 전쟁의 종전 합의 가능성과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게 주산업의 판단이다.

앞서 광주와 전남은 지난 2월 분양전망지수가 각각 95.0, 92.3까지 올라가며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그러나 중동전쟁 이후 3월 광주 90.5, 전남 83.3에 이어 지난 달 각각 30.5p, 50p 급락했다.

주산업은 이번 반짝 상승한 분양전망보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 미·이란 갈등 추이,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요인들에 따른 시장 흐름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전월 대비 19.1p 상승했다. 수도권은 85.6으로 4.5p 올랐고, 비수도권도 78.8로 22.2p 상승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04.7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등과 고환율에 따른 공사비 상승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쟁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페인트·창호 등 주요 자재값이 오르고 1400원 후반대의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단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비용 등 금융 조달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돼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83.1로 6.6p 하락한 반면,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100.0으로 5.9p 상승했다.

연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광주시의 황인일 회장, 전남도의 박경재 회장 등 16개 시도회장과 30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 "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개방 연기 안돼" 종합건설업계, 국토부에 탄원서... "영세 종합업체 존립 위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폐지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전문건설업계 주장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업역 이기주의"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는 12일 광주시회 황인일 회장, 전남도회 박경재 회장 등 16개 시도회장과 300여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간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에 시장이 왜곡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건협은 "정부가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2021년 확정했으나 영세 전문업체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

에 진출할 수 있게 한 반면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았다"고 지적했다.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전체 전문공사의 90%를 넘는다고 건협은 설명했다.

건협은 "보호 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체는 다시 보호 금액을 10억원으로 높이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돼 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체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건협 시도회장은 탄원서 제출 후 국토부를 방문해 건설정책과장을 면담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사학연금-폴리텍대학, 재취업 기술교육 지원

### 기술교육 역량 활용 퇴직 교직원 일자리 창출 등 협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 이사장 송하중)과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 이사장 이철수)은 12일 폴리텍대학 학교법인 비전실에서 '퇴직 교직원 직업교육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사학연금 퇴직 교직원과 연금수급자의 재취업 및 경력전환을 위해 기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재취업 기술교육과정 개발 및 특화과정 공동운영 △재취업 설명회·상담 공동운영 △교육과정 모집·홍보 협력 △전문강사 인력풀 상호 제공 등을 추진한다.

사학연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설계해 은퇴 후 노후설계 교육, 정서 지원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재직 교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캠프, 퇴임 대비 연수 및 연금 업무 담당자 연수, 연금수급자 사회참여 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융합형 기술·기능 인력 양성 및 평생직업능력 개발 전문 기관으로, 직업 능력 개발 교육과 산학 협력에 앞장서 있으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대학 교육과 중장년 특화과정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중 이사장은 "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교육을 지원해 퇴직 후 소득공백을 겪는 퇴직 교직원과 재



취업 및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연금수급자에게 더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교직원의 재직 중 삶의 질 향상과 퇴직 후 가치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